

<동북아 국제안보 3조>

박근혜 정부의 보수노선 선회와 사드배치 수용

2023. 12. 04

지도교수: 엄상윤

최효준(조장, 디지털헬스케어)

신희은(정보통계)

윤재홍(경영)

이준형(컴퓨터정보통신)

김현호(컴퓨터정보통신)

신용석(국어국문)

목 차

- I . 서론
- II . 보수세력의 응집력 강화
- III . 대북 미사일억지력 강화
- IV . 한미동맹 강화와 한일관계 개선
- V . 결론

I . 서론

박근혜 정부는 초기에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한·중 FTA’, ‘동북아평화협력 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등 주로 중도적인 정책들을 펼쳤다. 하지만, 초기 정책과는 다르게 박근혜 정부는 2016년 7월 8일 주한미군의 사드배치를 수용했고 이러한 결정은 당시 국내에 많은 논쟁거리를 불러왔다.

사드(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는 미군의 탄도탄 요격유도탄 체계로 미국의 록히드 마틴(Lockheed Martin)이 설계, 제작, 조립했다. 사드는 공격해오는 탄도 미사일을 탐지, 추적하여 종말 단계의 40~150km 중·상층 상공에서 목표물을 파괴하는 데 중점을 둔 시스템이며 대기 중의 미사일을 신속하게 탐지하고 추적하여 목표물을 정밀하게 겨냥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 대륙 간 및 중거리 미사일에 대한 방어 역할을 하며 공중 충돌로 접근하여 탄도 미사일을 파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직격파괴방식(hit-to-kill-technology)을 사용한다. 사드는 스스로 움직이거나 트레일러에 실려 움직이는 이동식이며 1개 포대에는 AN/TPY-2 레이더와 6개의 발사대, 발사대당 8개의 요격미사일과 추가로 27~28t 무게의 주전력공급 차량과 냉각장비 차량이 포함된다. 사드를 구성하는 AN/TPY-2 레이더의 모드 중 전진배치형은 약 1,000km에서 2000km까지 탐지가 가능하며 종말 모드에서는 600여km까지의 탐지거리를 가진다.

이런 사드의 한국 배치 추진에 문제를 촉발한 나라는 미국이었다. 2014년 6월 3일, 커티스 마이클 스캐퍼로티(Curtis Michael Scaparrotti) 한미연합사령관은 한국국방연구원(KIDA) 초청 강연에서 사드의 한국 배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사드 배치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으며 “요청도, 협의도, 결정도 없었다”라는 공식 입장을 견지했다. 이처럼 박근혜 정부는 미국의 사드배치 요청에 대해 결정을 미루는 ‘전략적 모호성’ 정책을 구사하였다. 하지만 2016년 7월 8일, 박근혜

정부는 ‘전략적 모호성’ 정책을 포기하고 주한미군에 사드배치 수용을 결정하였다. 그렇다면, 박근혜 정부는 왜 2년 동안 지속해온 ‘전략적 모호성’ 정책에서 벗어나 사드배치 수용을 했을까?

이런 질문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첫째, 박근혜 정부의 사드배치 수용은 미국 MD의 한국배치를 수용한 첫 사례일 뿐만 아니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 배경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드 배치를 수용했다는 것은 한국 정부의 정책적 변화를 의미한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의 의도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은 향후 양자택일의 상황에서 유사한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면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박근혜 정부의 사드배치 수용 배경에 대한 연구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박근혜 정부의 사드배치 수용에 관한 대부분의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외교적 관계 변화, 한국의 경제적 손실 등 주로 사드배치 수용의 영향과 결과를 중점으로 다룬다. 사드 배치 수용의 이유를 다룬 일부 연구들은 주로 대북 억지력 강화와 한·미동맹 강화를 언급하고 있지만 박근혜 정부의 사드배치 수용에 관한 심층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가설을 미리 소개하자면, 박근혜 정부의 보수노선 선회가 사드배치 수용의 핵심 이유라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런 가설을 분석지역 수준별로 접근하여 II장에서는 한국 차원, III장에서는 한반도 차원, IV장에서는 동북아 차원에서 분석·논증해보고자 한다. 마지막 V장에서는 II·III·IV장의 분석 결과를 요약·정리하고 그 함의와 시사점을 제시하면서 본 연구를 마무리한다.

II. 보수세력의 응집력 강화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수용 결정은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중요한 분기점으로 간주한다. 이 결정은 보수 진영의 근본적인 안보 우려를 반영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선출된 2013년 이후, 출범 직후의 박근혜 정부는 다양한 정책 영역에서 이명박 정부와는 달리 중도적 대립 정책을 추진하는 면모를 보여주었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평화 및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노력이나 친중정책과 같은 것들이 이러한 측면 중 하나였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 간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문제 해결의 병행추가, 한미동맹 강화와 한중협력 강화의 병행추가 등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며 나아가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려는 정책’으로¹⁾ 전반적으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볼 수 있었지만, 이러한 정책은 보수적인 견해에서는 예상되지 못한 정책이었다. 일부 보수 성향의 정치인들은 북한에 대한 보다 강경한 태도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에 박근혜 정부가 채택한 중도적인

1) 엄상윤. (2015). 정세와 정책.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2년: 중간평가와 개선방향. 10p

정책에 불만이 있었다. 친중정책 역시 한중관계를 강화하려는 시도였지만, 일부 보수 성향의 사람들은 한중관계를 너무 많이 강조하거나 의존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사드배치 결정 과정은 한반도 안보와 관련하여 국내 정치적인 갈등을 일으키는 중요 이슈 중의 하나였고, 이 문제를 둘러싸고 보수세력과 진보세력은 각각 찬성과 반대의 견해를 취하며 논란이 빚어졌다. 보수세력은 사드배치를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고 국가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으로 간주하고 대북 안보대책의 일부로서 북한의 핵 능력에 대비하기 위함이라 주장했다. 또한 사드배치를 통해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미국과의 협력을 강조하는 한편, 지역 안보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중요한 수단이라 주장했으며 사드배치는 미국의 요청에 따른 결정이기에 한반도 안보를 위해 미국과의 긴밀한 동맹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진보세력은 사드배치로 인해 지역 안보가 악화하고, 중국의 반발로 인해 한반도의 안정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함과 동시에 중국의 사드배치에 대한 강한 반대를 크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드 기지가 위치할 예정으로 거론되던 경기도 성남시의 주민들은 국제정세의 여파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는데, 진보세력은 민간인의 안전을 도모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나아가 진보세력은 사드배치로 인해 한국과 중국 간의 경제적 마찰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중국의 사드배치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소비 제한 등의 경제적 손실을 크게 우려했다. 결론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사드배치 수용은 진보세력의 주장을 묵살하고 보수세력의 주장을 수용했기에 보수세력의 불만이 높았다고 판단된다.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이전의 중립적인 외교정책에 대한 보수세력의 비판은 여러 측면에서 나타났다. 먼저, 중국과의 경제적 종속성이 높아져 외교적 교란이 발생했다는 비판이 있었다. 중립적인 외교정책은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강조하면서 정치적 독립성을 상실하게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보수세력은 중국과의 협력은 필연적이지만 동시에 다양한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해서 국가의 전반적인 안보와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태도를 제시했다. 두 번째로, 북한에 대한 대응이 너무 미온적이라는 비판과 이에 대해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도발에 대해 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러한 비판은 보수세력이 외교적인 대화보다는 강력한 대응이 국가의 안보를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시각을 반영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미국과의 동맹 강화 부재가 국가의 안보를 약화하였다는 비판도 제시되었다. 중립적인 외교정책이 미국과의 동맹을 소홀히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주장이 나옴과 동시에 외교정책의 일관성 부재를 비판하며 국익과 안보를 중시하는 일관된 외교정책이 중요하다고 비판했다.

2016년 7월 8일 박근혜 정부의 사드배치 수용 공식 발표 이후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로 ²⁾보면 주요지지 정당별로 볼 때 새누리당 지지층(305명)은 67%가 '잘하고 있

2) 갤럽리포트 “데일리 오피니언 제219호(2016년 7월 2주) -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사드 배치”
2016.07.14. <https://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760>

다'고 답변한 것을 볼 수 있다. 보수세력에 있어서 안보를 강화하는 등 여러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에 박근혜 정부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높아지게 된 것이다. 보수세력은, 사드배치 수용 이전에 박근혜 정부의 중립 외교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사드배치 수용 이후에는 이런 비판적인 태도가 크게 약화되었다. 이는 보수세력의 국가안보와 강력한 대응을 강조하는 가치관을 잘 반영하고 있다. 이렇듯 사드배치 수용은 보수세력의 응집력을 강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3)<표 1> 제 20대 국회의원선거 개표 결과

정당	지역구	비례대표	총 의석수
더불어민주당	110	13	123
새누리당	105	17	122
국민의당	25	13	38
정의당	2	4	6
무소속	11	-	11

2016년 4월 13일에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도 사드 배치 수용과 관련하여 한국 보수 진영에 중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언론의 선거 전망과 여론조사가 새누리당의 우세를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선거 결과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당인 새누리당의 패배와 야당의 압승으로 귀결되었다. 이 결과는 다양한 중앙 및 지역적 이슈들의 복합적인 영향력이 반영된 것이다.

선거의 중앙 이슈들, 특히 '현 정부에 대한 심판론', '새누리당의 공천 갈등', 막말 논란은 주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지지층에게 영향을 미쳤다. 반면,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해외 북한식당 종업원의 입국 이슈는 새누리당 지지자들에게 더 큰 영향을 주었다. 지역 이슈에서는 4)'새누리당 후보의 원희룡 마케팅 논란'*과 5)'제주 해군기지 구상권 청구 논란'*이 더불어민주당 투표자들에게 영향을 미쳤으며, '국민의당의 거대 양당 심판론'과 새누리당 후보들의 재산 신고 누락문제는 유권자의 투표 행태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6)이러한 분석은 보수 진영이 유권자들의 다양한 요구와 우려를 반영하는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내부적 단합과 갈등 해소에 주력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사드배치 수용 결정은 이와 관련하여 한국의 안보 상황과 국제 외교에 대한 중요한 결정으로서, 보수 진영의 정치적 태도와 전략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 결정은 보수세력을

3) KBS 뉴스 “총선⑪ 한눈에 일목요연! 20대 선거결과 총정리”

2016.04.14.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3264007>

4) 원희룡 제주지사는 4.13 총선에서 새누리당 후보들이 자신과 찍은 사진을 활용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현했음. 이는 도지사의 역할을 제한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5) 정부는 제주 해군기지 공사 방해와 관련하여 강정마을 주민과 시민단체에 대한 34억5000만원 구상권 청구 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했었다. 이는 법원의 강제조정안에 따른 것으로, 일부 단체가 사드 체계 배치 반대 시위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었음.

6) 임재형, 김강민. (2023). 한국사회 이념갈등의 발생 원인과 해결방안 : 사드 배치 갈등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28(2), 5-29. p.28-29

단합과 갈등 해소에 크게 기여했다. 이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박근혜 정부의 사드배치 결정은 진보세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보수세력의 안보중시정책을 강화하고 정치적 응집력을 증진하는 전략적 선회였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의 사드배치 수용은 보수세력의 결속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반영된 것이다.

III. 대북 미사일 억지력 강화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나 '동북아평화협력 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과 같이 초기에 중도적인 정책들을 펼쳤으며 북한과 전략적 신뢰를 구축하고자 하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동북아평화협력 구상' 등을 통해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자 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평화정착, 통일 기반 구축이 있다. 박근혜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 측면에서 '상식과 국제규범이 통하는 새로운 남북관계 구축과 그것을 통한 상호 호혜적 사회·문화 공동체 건설 추구'를, 평화정착 측면에서는 '남북협력과 국제협력의 균형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달성 남북간 정치·군사적 신뢰를 증진시켜 지속가능한 평화 정착'을, 통일기반 구축 측면에서는 "일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고, 실질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역량 확충 한반도 통일 과정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며, 한반도와 국제사회 모두 윈-윈(win-win)하는 것임을 실감할 수 있게 함."이라고 천명했다.

박근혜 대통령 임기 초기, 2013년 4월 2일 북한은 영변 원자로를 재가동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으며 이에 한·미 양국이 규탄했던 사건이 있었다. 그 후, 2014년 3월 독일 드레스덴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의 제목으로 발표를 진행했고, 남북 주민의 인도적 문제 우선 해결, 남북 공동 민생 인프라 구축,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 이를 이루기 위한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 제안을 주로 언급하였다. 더하여 "북한이 핵을 버리는 결단을 한다면, 이에 상응하여 북한에게 필요한 국제금융기구 가입 및 국제투자 유치에 우리가 나서서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북한의 핵 포기 상황에서 한국의 지원 또한 언급하였다. 이 밖에도 '개성공단 국제화',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서울과 평양에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 '시베리아철도(TSR)-중국횡단철도(TCR)-한반도종단철도(TKR)를 연결해 복합 물류 네트워크로 발전' 등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했으나, 북한의 호응 부재로 인해 이산가족 상봉, 개성공단 정상화 및 국제화 합의, 비정치적 남북교류협력 등의 지엽적인 성과일 뿐 근본적인 남북관계 개선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신뢰프로세스'는 1단계인 '인도적 대북지원'이 북한의 폐쇄적인 태도로 인해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⁷⁾ 단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드레스덴 선언에 대해 북한은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책임회피를 위한 뻔뻔스러운 말장난'이

7) 엄상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2년: 중간평가와 개선방향", 『정세와 정책』 2015년 4월호 (세종연구소, 2015), pp. 10-11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북남관계가 파국에 처한 원인은 괴뢰당국이 외세와 야합해 반 공화국 압살 야망을 획책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⁸⁾ 이외에도 북한 비핵화 협상의 핵심인 6자 회담은 2016년 7월을 기준으로 8년째 공전 상태가 지속되고 있었다.⁹⁾ 이렇듯 북한은 한국의 '신뢰프로세스' 정책에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였으며 오히려 동해로 신형 단거리 미사일 발사(2014-09-01), 서해로 KN계열 미사일 발사(2015-04-02) 북한의 4차 핵실험(2016-01-06), 장거리 미사일 광명성 4호 도발 (2016-02-07) 등 지속적으로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강행해왔다.

북한의 지속적인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때문에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추진하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책과 같은 중도적인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수밖에 없었다. 신뢰프로세스는 북한의 호응이 있어야 작동할 수 있는 것인데, 북한의 연이은 대남 도발과 핵실험은 역으로 불신을 조장하는 행위였기 때문이다.¹⁰⁾ 이 밖에 요인으로 주변국들의 호응 부재가 있었다. "신뢰프로세스"의 핵심은 북한을 포함한 주변국들의 신뢰감을 형성해 북한에 대한 비핵화, 개방을 이끌어내는 정책인데 주변국, 특히 중국의 갑작스런 호응 부재가 컸다.

이전에 중국은 유엔안보리 결의안 2094호 채택에 협조적이었고, 북한지역에 대한 중국인의 관광 금지, 북한으로 반출되는 개인 소지품의 20kg 제한 조치의 엄격한 적용, 조선무역은행에 대한 제재조치를 시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호응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북한의 도발 위협과 핵 개발에 대한 중국의 미온적 태도가 북중관계의 강화에는 도움이 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주변국들의 반발과 미국의 압박으로 오히려 중국에게 부담이 된다는 평가에 따른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2013년 9월 6자회담 재개의 조건으로 북한의 비핵화 사전조치를 둘러싼 미·중 간 이견이 노출되는 것을 기점으로 불투명해졌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할 방법은 북한이 적극적으로 호응하도록 채찍을 강화하는 것이다. 북핵문제는 북한이 핵을 비대칭 전력으로 삼아 한국을 상대로 한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점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생긴다. 따라서 역으로 그 의도를 이용하여 한국이 북핵을 방어할 능력이 있음을 알리는 것은 북한에 큰 억지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¹¹⁾ 이런 맥락에서 박근혜 정부는 2016년 7월 8일 사드 배치를 수용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이는 남북관계 개선에 매우 큰 차질을 빚는다고 예상되었으나, 핵실험, 무력도발 등을 지속하는 북한에 유화적 안보 정책을 지속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이다.¹²⁾

8) 연합뉴스, "북한 "'드레스덴 구상'은 흡수통일 위한 대결선언", <https://www.yna.co.kr/view/AKR20150407061300014?input=1195m>(검색일:2023.12.02.)

9) 엄상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2년: 중간평가와 개선방향", 『정세와 정책』 2015년 4월호 (세종연구소, 2015), p. 12

10) 변창구, "박근혜 정부의 국가안보전략과 사드(THAAD)", 『통일전략』 제16권 4호 (한국통일전략학회, 2016) p. 149

11) 엄상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2년: 중간평가와 개선방향", 『정세와 정책』 2015년 4월호 (세종연구소, 2015), p. 12

12) 변창구, "박근혜 정부의 국가안보전략과 사드(THAAD)", 『통일전략』 제16권 4호 (한국통일전략학회, 2016) p. 150

사드는 당시 한반도에서 가장 유효한 미사일 방어 수단 중 하나로 예상되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KBS 뉴스에 출연해 사드로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도 요격할 수 있고 “북한이 보유한 스커드, 노동, 무수단 미사일을 다 요격할 수 있다”라고 하였으며 미군은 사드로 시행한 11번의 격추 실험에서 모두 성공적이었고 사드가 현존하는 탄도 미사일 방어체계 중 가장 성공률이 높았다고 언급했다.¹³⁾ ‘2016 국방백서’는 “북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대응하기 위해 우리 군의 독자적인 억제 및 대응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한국형 3축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라며 사드에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여기서 3축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실시간으로 탐지해 표적을 타격하는 공격체제인 킬체인(Kill Chain·1축)과 북한의 미사일을 공중에서 방어하는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2축), 북한의 미사일 공격 시 미사일 전력과 특수작전부대 등으로 지휘부를 응징하는 대량응징보복(KMPR·3축) 등을 의미한다.¹⁴⁾

사드는 2축을 구성하는 KAMD에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당시 PAC-2에 기반한 한국의 미사일 방어체계는 고도 10~15km 선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기에, 이는 여러 번의 요격 기회를 얻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의미했다. 이에 비해 사드는 중·상층 방어가 가능하며 고도 40~150km 선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으므로 사드를 배치한다면 한국의 미사일 방어체계는 북한의 미사일을 여러 차례 요격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¹⁵⁾ 특히 북한은 2014년 3월 사거리 1300km의 노동 미사일을 고각도로 발사해 650km 사거리로 곡사하는 실험을 하였는데, 노동 미사일이 마하 7로 낙하한다면 한국군이 도입 예정이었던 PAC-3 미사일로도 5초 내로 요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이는 당시 PAC-2뿐인 한국의 미사일 방어체계로는 막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중·고 고도에서 요격할 수 있는 사드 배치 수용을 미룰 수 없음을 드러내는 사안 중 하나였다.¹⁶⁾ 이런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사드배치는 KAMD 체계에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미사일 방어가 더 견고해지기를 기대해 박근혜 정부는 주한미군에 사드배치를 수용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미사일 억지력 강화를 이루려고 했음을 알 수 있다.

IV. 한·미 동맹 강화와 한일 관계 개선

2010년 이후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이 점차 심화하고 있었다. 이는 양국이 글로벌 정치·경제 무대에서 우위를 쟁취하고자 하는 의도와 함께 국제적 갈등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동북아시아 지역은 자연스럽게 미·중 패권경쟁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지역이 되었다. 특히 한국이 속한 한반도는 정치적, 경제적, 전략

13) United States Forces Korea, “THAAD Fact Sheet 사드 사실보고서”, <https://www.usfk.mil/Media/Press-Products/Press-Releases/Article/1301280/thaad-fact-sheet/> (검색일:2023.12.02.)

14) 대한민국 국방부, 『2016 국방백서』 (대한민국 국방부, 2016), p.36

15) 변창규, “박근혜 정부의 국가안보전략과 사드(THAAD)”, 『통일전략』 제16권 4호 (한국통일전략학회, 2016) p. 152

16) 홍규덕 “사드(THAAD) 배치에 관한 주요쟁점과 미사일방어(MD) 전략” 『신아세아』 제22권 4호 (신아시아연구소, 2015) pp. 122-123

적 요인으로 인해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에서의 정치·안보·경제적 영향력 확장을 통해 서로에 대한 전략적 우위를 차지하고자 했다. 더욱이 한국은 군사적 측면에서는 미국, 경제적 측면에서는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막중하기에 미·중 양국으로부터 커다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박근혜 정부의 사드배치 수용과정은 이런 상황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직후 이명박 정부의 친미 외교에서 탈피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다시 말해, 박근혜 정부는 미·중 사이에서 한미동맹과 한중 동반자 관계의 조화·발전을 통한 동북아 평화협력체제구축이라는 외교적 기조를 천명했다. 박근혜 정부는 중국과의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국과 2013년 4월 26일부터 2014년 11월 6일까지 한·중 FTA와 관련하여 10차례 협상을 하였고 드디어 2014년 11월 10일에 한중 FTA 협상 실질적 타결을 선언하였다. 한편, 박근혜 정부는 오바마 대통령, 바이든 부통령의 방한 등 여러 차례 미국과 회담을 했고 2013년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을 하는 등 한미 양국 간 관계를 향상하려는 노력을 보여줬다.¹⁷⁾

하지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은 오래 지속될 수 없었다. 그 이유는 미·중 패권 경쟁이 점차 심화되고 있었고, 2014년 6월 3일부터 미국이 한국에 사드 배치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강요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2016년 7월 8일, 박근혜 정부는 중국의 불만과 압박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를 수용함으로써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미국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박근혜 정부가 미국을 선택한 이유는 중국의 압박보다 미국의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중국의 위협 중 가장 위협한 무역 보복은 한국에 큰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작았다는 것이다. <표 2>를 보면 2015년 당시 한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품목의 가공단계는 자본재 21.71%, 중간재 73.37%로 자본재와 중간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당시 중국은 경제발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이었고,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한국에 무역 보복을 하게 될 경우 다른 나라에서 자본재와 중간재를 수입해야 했다. 하지만, 자본재와 중간재는 단기간 대체가 어렵기에 중국의 무역 보복은 제도에 제 발등 찍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판단되었다는 가능성이 크다. 즉, 중국의 무역 보복은 당장 이루어질 수 없기에 한국은 중국의 무역 보복 이전에 중국 수출 비중을 낮추고 다른 나라와의 무역을 활성화하는 등의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는 것이다.¹⁸⁾

<표 2> 2015년 가공단계별 중국 수출품 구분

17) 김태형, "박근혜 정부 전반기 4강외교 평가: 미중 패권경쟁과 한국의 전략적 선택," 『한국사회』 제15권 제2호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2014), p.39.

18) 정진영, 『중국의 사드 보복과 한중 관계의 미래』(서울: 코리아연구원, 2017), pp.13-16.

가공단계별	수출액(US\$)	비중(%)
1차산품	634,776,079	0.46
소비재	6,095,724,914	4.44
자본재	29,775,718,043	21.71
중간재	100,627,199,470	73.37
기타	24,984,406	0.02
합	137,158,402,912	100

출처: 한국무역협회, "가공단계 수출입," <https://stat.kita.net/stat/kts/use/BecList.screen> (검색일: 2023년 11월 20일)

한편, 미국과의 무역을 크게 고려하였다는 결과가 보여진다. <표 3>을 보면 한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품목은 중간재 46.28%, 소비재 31%, 자본재 22.38% 순서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렇기에 자본재, 중간재의 비중이 높은 대중 무역과는 달리, 대미 무역은 쉽게 대체할 수 있는 소비재의 비중이 높기에 한국이 이 비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관계를 향상하려고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표 3> 2015년 가공단계별 미국 수출품 구분

가공단계별	수출액(US\$)	비중(%)
1차산품	84,296,176	0.12
소비재	21,654,774,138	31
자본재	15,637,270,537	22.38
중간재	32,334,785,667	46.28
기타	150,574,908	0.22
합	69,861,701,426	100

출처: 한국무역협회, "가공단계 수출입," <https://stat.kita.net/stat/kts/use/BecList.screen> (검색일: 2023년 11월 20일)

무역 외에도 사드배치 수용을 통한 한미동맹 강화는 한국에 많은 이익을 안겨다 줄 수 있었다. 우선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함으로써 얻는 안보적·경제적 이익이다. 주한미군의 존재로 한국은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할 수 있고 사드 배치를 수용함으로써 아직 한국이 미비한 종말 단계에서 상층 방어도 가능하게 되어 안보적으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표 4>를 보면, ¹⁹⁾주한미군의 가치는 2조 7,380억 원으로 추정되는데, 한국은 주한미군의 주둔으로 절감될 수 있는 이 비용을 다른 곳에 사용할 수도 있었다. 그리고 당시 한국은 북한 때문에 '국가 위험도'가 다른 나라보다 높은 상황이라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하기 쉽지 않은 환경이었지만, 주한미군의 주둔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주는 안정감 때문에 해외자본 유치 및 투자가 쉬워졌고 이는 경제적으로 한국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었다.²⁰⁾

<표 4> 전력을 고려한 주한미군의 가치 추정

19) 권현철, "주한미군의 가치 추정: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체비용 추정," 『국방연구』, 제54권제2호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11), p.37.

20) 최상복, "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연구,"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2014, p.150.

미 육군의 가치 추정액	미 공군의 가치 추정액
13조5,105억원 * 12.2% = 1조 6,888억 원 *13조5,105억원: 2011 육군 배정예산 *12.5%: 주한 미 육군의 전투력 비율 (한국군 대비)	6조2,829억원 * 16.7% = 1조 492억 원 *6조2,829억원: 2011년 공군 배정예산 *16.7%: 주한 미 공군의 전투력비율 (한국군 대비)
주한 미군의 가치 추정액: 총계: 2조 7,380억 원	

출처: 권현철, "주한미군의 가치 추정: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체비용 추정," 『국방연구』, 제54권제2호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11).

이처럼 박근혜 정부는 미국과 중국이 주는 손익을 계산하였을 때, 중국이 주는 경제적 이익보다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적·경제적 이익이 더 높고, 중국이 주는 무역 보복은 감수할 수 있는 문제로 판단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한편, 일본은 중국과 달리 한국의 사드 배치를 적극적으로 찬성한 나라 중 하나이다. 일본은 항상 대북 방어에 힘쓰고 있으며, 주일미군의 AN/TPY-2 레이더가 배치되어 있는 나라 중 하나이다. 한국의 사드 배치 이전에도 미국은 일본을 중·러의 방어기지 중 하나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일본도 미국에 군사적으로도 많은 지원을 받아 일본 열도 전체에 여러 가지 주일미군의 군사적 요소가 배치되어 있다.

한국과 일본은 사드 배치 이전부터 독도,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로 여러 갈등을 겪고 있었으며, 당연하게도 이는 두 나라에 서로 외교 및 안보까지 냉각 형태를 보이고 있었다. 이런 냉각 형태 탈피를 위해 박근혜 정부는 2015년 12월 28일, 일본과의 외교 중 가장 크게 작용했던 사건인 위안부 문제를 협상 합의하여 냉각 형태를 바꾸려는 시도를 했다. 그동안 일본은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규범적 통제를 피하고 싶어 했으며, 특히 2012년에서 2014년 사이 두 나라의 무역 수출 감소는 계속되고 있었다. 일본은 한국과의 무역 교류 변화는 위안부 문제와는 관련 없다고 주장했지만, 시기와 국내 및 일본 내부 상황으로 보면 위안부 문제가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박근혜 정부의 2015년 위안부 합의 문제는 결과적으로 위안부 문제가 불거진 이후, 처음으로 일본과의 관계가 진전을 보였던 합의라고 볼 수 있다. 위안부 합의로 시작된 한일 관계개선은 박근혜 대통령의 사드 배치 언급 이후 더욱 빠르게 진전되기 시작했다. 미국도 그동안 한국과 일본의 불편한 관계로 동북아시아에서 빠르게 부상하고 있던 중국을 견제하기 힘들었지만, 위안부 합의를 통한 한일관계 개선으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혜택을 보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위안부 문제 합의를 "한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합의만큼이나 중대한 것"²¹⁾이라며 평가한 바 있다.

2016년 1월,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의 사드 배치 수용 검토를 처음 언급한 이후 2016년 2월, 아베 총리는 박근혜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 "일본은 한국의 사드 배치

21) 연합뉴스, 미 "TPP만큼 중요한 합의...한·일 협력 미국에 이익", <https://yonhapnewstv.co.kr/news/MYH20151229008700038>

를 위한 대처를 지지한다"라며 지지 의사를 밝혔고, 2016년 7월, 기우다 고이치 관방부 장관 또한 한국의 사드 배치 지지를 언급했다. 일본으로서 한국의 사드 배치는 당연하게도 일본에 긍정적인 부분이 크다. 가장 기본적인 비용 측면에서, 한국의 배치되는 사드는 결국 미국과 한국의 비용 부담이기에 일본으로서 배치 비용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 어떠한 고도로 미사일이 들어와서 사드가 미사일을 요격한다 한들, 일본에는 결과적으로 방어 효율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본으로서 거절할 이유가 없다. 일본의 MD 핵심 개념은 다층 방어이며, 대기권 밖 요격 외에도 고도 별 미사일로 북한 미사일 대응 태세를 갖추고 있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사드 배치는 일본으로선 다층 방어를 어떠한 예산 및 군사 지원 없이 한 단계 더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런 일본의 입장을 고려했을 때,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수용은 한일관계 개선을 촉진시킬 여지가 다분히 있었다.

2016년 10월,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점증하는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일본과 군사정보를 직접 공유하기 위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 협상을 4년 만에 재개하기로 발표했다. 한국의 사드 배치 문제로 중국과의 외교 문제로 인해 협상이 종료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북핵 문제에 대한 의견 및 정보를 나눌 수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도 이끌어냈다. 이는 사드 배치 수용을 통해 미국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일본과의 관계도 긍정적으로 진전시키는 효과를 발휘했던 것이다. 한국의 사드 배치 수용 이후,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 핵실험이라는 공동의 도전에 대한 한·미·일 간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것”이라며²²⁾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했다. 이는 한·미·일 MD 협력으로 한미동맹이 강화되고 한일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미·일 군사동맹이 중국과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압박해 동북아시아가 더 위험해질 가능성 또한 높아져 이에 한·미·일과 북·중·러 대립 구도가 심화될 여지도 다분히 있었다. 하지만 이런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의 사드배치 수용이라는 결정은 한미동맹 강화와 한일관계 개선을 이끌어내어 대립 구도 속에서 보수적 위치를 확고히 하려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V. 결론

본 논문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사드배치 수용은 ‘보수노선으로의 선회’를 위함이라는 가설을 세웠으며 이를 분석지역 수준별로 나누어 분석했다.

II장에서는 한국 지역 차원에서 분석해 보았다. 박근혜 정부의 중도적인 정책에 대한 보수층의 불만이 대통령 직무 수행평가와 20대 국회의원 총선 등에서 나타났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추가적인 ‘현 정부에 대한 심판론’, ‘새누리당 공천 갈등’ 등 비판적인 여론이 뒤따랐다. 이로 인해 보수세력에 대한 내부적 단합과 갈등 해소에 주력할

22) 경향신문, “박 대통령, 오바마 20분 전화통화.. 강력하고 포괄적 대북 제재 신속 추진”, <https://khan.co.kr/politics/assembly/article/201601071119041#c2b>

필요가 강조되었다. 박근혜 정부의 사드배치 수용은 보수세력의 단합과 갈등 해소에 기여했으며 정치적 응집력을 강화하는 결정이었다.

Ⅲ장, 한반도 지역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동북아평화협력 구상’과 같은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비협조적인 태도를 고수했다. 지속적인 핵 실험과 미사일 도발이라는 행동을 보여주었고 박근혜 정부는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검토를 할 수 밖에 없었다. 박근혜 정부는 사드배치를 통해 한국 안보의 2축을 구성하는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의 보강을 이루고 결과적으로 북한 미사일에 대한 억지력 강화를 이루려 했다.

Ⅳ장에서는 동북아 지역 차원에서 분석했다. 박근혜 정부는 친미 외교에서 탈피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 관계를 유지하려 했다. 일례로 박근혜 정부는 중국과의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한·중 FTA 협상을 타결하였고 미국과는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을 하는 등 양국 간 관계 향상에 주력했다. 하지만, 사드배치에 대한 양국의 압박이 계속되는 양자택일의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의 사드배치 수용은 결과적으로 미국을 선택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런 선택은 중국이 보복을 가하더라도 한·미 동맹 강화를 우선했다고 여겨진다. 또한 사드배치 수용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함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박근혜 정부는 위안부 문제 협상을 시작으로 사드배치 수용 이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체결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모습으로 보아 박근혜 정부는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가 다분했으며 사드배치 수용은 이를 이루기 위한 중간과정이었다고 분석했다.

Ⅱ장, Ⅲ장, Ⅳ장 분석 결과로 보아 박근혜 정부는 초기 중도적인 정책에서 탈피하고 보수노선으로의 선회를 위해 주한미군에 사드배치 수용을 했음을 알 수 있다.

기존 연구들은 주로 외교적 관계 변화, 한국의 경제적 손실 등 주로 사드배치 수용의 영향과 결과를 중점으로 다루었다. 일부 연구들은 대북 억지력 강화와 한미동맹 강화를 언급하고 있지만 박근혜 정부의 사드배치 수용에 대한 심층 연구는 미흡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존 연구들과 달리 보수세력 응집력 강화, 대북 미사일 억지력 강화, 한·미동맹 강화와 일본과의 관계 개선 등을 통해 박근혜 정부가 보수노선으로 선회를 이루려했음을 입증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박근혜 정부의 사드배치 수용에 대한 연구가 중요한 이유는 첫째, 박근혜 정부의 결정은 미국 MD의 한국배치를 수용한 처음의 사례일 뿐만 아니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이며 둘째, 사드배치 수용은 중도적인 정책에서 탈피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의 결정의 의도를 탐구하는 것은 이후 비슷한 양자택일의 상황에서 유사한 사태가 발생할 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참고문헌

고영철, 원성심. (2017). 제20대 총선에서 유권자 투표행태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관한 연구: 정당, 후보자, 이슈, 미디어, 유권자 속성을 중심으로.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 44, 49-83.

김일수, 『미중의 패권경쟁과 박근혜 정부의 대외정책』, (대한정치학회, 2014)

권헌철, 『주한미군의 가치 추정: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체비용 추정』,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11)

남창희·이종성. 2010.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일본의 대응: 패턴과 전망. 국가전략 제16권 2호.

배진석. (2018). 대북 및 안보정책 평가의 세대 및 이념요인. 한국과 국제정치, 34(2), 99-135.

변창구(Byun Chang-Ku). 박근혜 정부의 국가안보 전략과 사드(THAAD). 한국통일전략학회. 통일전략 16권 4호. 2016.11. 143 - 166(24 pages)

송지연, 『사드(THAAD) 배치를 둘러싼 한국과 중국의 정치적 갈등이 경제관계에 미치는 영향』,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20)

엄상윤. (2013).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구상:파생효과와 개선방향.정책보고서,74호

엄상윤. (2014). 한·미·일 MD협력의 양상과 전망. 국가전략, 20(2), 42~66)

엄상윤. (2015).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2년: 중간평가와 개선방향.세종연구소.10~13

유용원, [단독] “현무-4 단 1발로 北 금수산태양궁전 완파 가능”, 조선일보, 2021. 04. 03

임재형, 김강민. (2023). 한국사회 이념갈등의 발생 원인과 해결방안 : 사드 배치 갈등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28(2), 5-29.

정진영. 『중국의 사드 보복과 한중 관계의 미래』(서울: 코리아연구원, 2017).

최상복, 『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연구』, (한양대학교, 2014)

코리아연구원, 『중국의 사드 보복과 한중 관계의 미래』, (2017)

현대경제연구원, 『사드 배치에 따른 주요 이슈와 전망』, (2017)

홍규덕. (2015). 사드(THAAD) 배치에 관한 주요쟁점과 미사일방어(MD) 전략. 신아세아, 22(4), 110-134.

20대 총선 평가: 한국 정당정치의 해체와 새로운 재편의 서막?

<https://www.good21.net/issuepaper/?q=YToxOntzOjEyOiJrZXI3b3JkX3R5cGUiO3M6MzoiYWxsJit9&bmode=view&idx=1696926&t=board>(검색일: 2023년 11월 23일)

데일리 오피니언 제219호(2016년 7월 2주) -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사드 배치

<https://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760>

(검색일: 2023년 11월 25일)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올해 1월 이후 처음 40%대 회복

<http://www.realmeter.net/%EB%B0%95%EA%B7%BC%ED%98%9C-%EB%8C%80%ED%86%B5%EB%A0%B9-%EC%A7%80%EC%A7%80%EC%9C%A8-40%ED%9A%8C%EB%B3%B5>

/(검색일: 2023년 11월 18일)

위키백과, “박근혜 정부”

https://ko.wikipedia.org/wiki/%EB%B0%95%EA%B7%BC%ED%98%9C_%EC%A0%95%EB%B6%80(검색일: 2023년 11월 25일)

총선⑪ 한눈에 일목요연! 20대 선거결과 총정리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3264007>(검색일 : 2023년 11월 21

일

황총리, 성주 방문…'사드 반대' 군민들 물병 던지며 항의(속보)

<https://www.yna.co.kr/view/AKR20160715082300001>(검색일: 2023년 11월 25일)

[사설]韓美 사드 도입 확정, 대통령이 불가피성 설득 나서야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60708/79100560/1>

(검색일: 2023년 11월 25일)

조별 활동내역

회차	활동일자	참석자	장소	활동시간	활동내용
1	9/23	윤재홍외	zoom회의	1시간	주제 선정
2	9/26	전원	학생회관 4층	2시간	주제 선정 및 조원 소개
3	10/4	전원	zoom회의	2시간	주제 선정
4	10/8	전원	zoom회의	2시간	2조로 나누어 작성한 제네바합의, 사드 프로포절 발표 및 피드백
5	10/10	전원	학생회관 4층	1시간	세미나 후 사드배치로 주제 선정
6	10/22	전원	zoom회의	2시간	조사해온 자료 발표
7	11/3	전원	도서관	2시간	자료 조사 발표와 논문의 서, 본, 결 구상.
8	11/6	전원	zoom회의	1시간	교수님 피드백으로 다시 개요 작성
9	11/7	전원	zoom회의	1시간	조원 내 서로에 대한 피드백 및 교수님께 질문사항 정리
10	11/8	전원	zoom회의	2시간	본론을 한국 내부, 한반도 내부, 동북아 내부에서 분석하기로 했으며 각 파트별 분배
11	11/13	전원	zoom회의	3시간	각 파트에서 조사 후 정리한 결과 물 발표 및 추가 피드백을 통한 본론 수정
12	11/20	전원	zoom회의	2시간	각 파트 별 논문 초고 작성
13	11/24	전원	도서관 세미나실	2시간	논문 초고 취합 및 다듬기
14	11/28	전원	학생회관 4층	1시간	파트 별 피드백 및 역할 재분배
15	12/1	전원	도서관 세미나실	3시간	논문 최종 수정
16	12/2	전원	zoom회의	1시간	재검토

개인별 역할분담내역

성명	활동 내역
공동	재검토 및 피드백, 본론 작성, 최종 검토
최효준(조장)	조별 활동 관리 전체적인 내용관리 등 1차 프로포절 사드배치 담당 한반도 내부 파트 자료조사 및 본문 작성 최종 취합 및 편집
신희은	1차 프로포절 제네바 합의 담당 동북아 지역 파트 자료조사 및 본문 작성 최종 취합 및 편집
윤재홍	1차 프로포절 사드배치 담당 동북아 지역 파트 자료조사 및 본문 작성
이준형	1차 프로포절 제네바 합의 담당 한국 내 파트 자료조사 및 본문 작성
김현호	1차 프로포절 제네바 합의 담당 한국 내 파트 자료조사 및 본문 작성
신용석	1차 프로포절 사드배치 담당 한반도 내부 파트 자료조사 및 본문 작성